

『인권연구』 9(1): 191-199.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9(1): 191-199.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6.9.1.191>

[서평]

## 현대 민주주의 사회 개혁을 위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의 처방:

『자유와 평등(*Free and Equal*)』

(대니얼 찬들러, 홍기빈 옮김, 교양인, 2026) 서평

조 석 주\*

대니얼 찬들러(Daniel Chandler)의 『자유와 평등』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개혁 의제를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의 처방과 대안이 적용되는 범위는 대체로 경제적 풍요를 어느 정도 갖추고 선거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사회들이다. 또, 저자의 사회 비판과 처방이 도출되는 규범 이론은 롤즈(John Rawls)의 정치철학이다. 저자 스스로 이 책의 목표를 “롤즈의 이론을 활용해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롤즈의 정치철학을 설명한다. 이어서 2부에서는 롤즈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여러 정치경제적 이슈들을 논의하고 제도적·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 중 1부는 롤즈의 이론에 대한 요약·해설로서 이 책의 구성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평이하고 명료하게 잘 서술되었다. 그 내용은 롤즈 이론의 통상적 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 롤즈의 이론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이 서평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 글은 찬들러의 정치경제적 처방이 서술되어 있는 2부에 집중하고자 한다.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 2부에서 처음 두 장(4장, 5장)은 자유와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 세 장은 보다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내가 보기에 챌들러의 주장을 끌어내는 데 롤즈의 이론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곳은 첫 번째 주제에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롤즈의 정의론은 우선성이 정해져 있는 원칙들로 구성된다.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를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2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용인하는 원리로서, 불평등과 결부된 지위와 직책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불평등의 용인은 반드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사람에게 유리하여야 한다는 차등원칙으로 나뉜다. 이 중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여 지켜져야 하며, 제2원칙 중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원칙에 우선한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한결 중요해진 자유의 충돌과 민주주의의 운용 문제에 대한 챌들러의 주장은 롤즈 정의론의 제1원칙과 롤즈 이론의 바탕이 되는 인간의 관계와 정치 공동체의 구성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책 4장의 주제인 자유의 충돌 문제를 보자. 롤즈의 이론에서 제1원칙은 다른 원칙보다 우선하며, 따라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오직 타인의 기본적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즉, 첫째,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사회후생의 증진이라든가 사회경제적 평등의 명분으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 둘째,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타인과 무관하게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으며, 기본적 자유에 대한 권리는 동등해야 한다. 이런 평등주의적 자유관이 자유의 충돌 문제에 대한 챌들러의 견해를 만든다.

챌들러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 종교적 신념의 자유, 성적·인종적 소수자의 권리 등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한쪽의 자유를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일이다. 따라서 자유의 문제는 단순히 국가의 간섭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신념과 삶의 방식을 추구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시민을 열등한 지위로 밀어내거나 사회관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차별금지법 논쟁에서 차별금지법이 평등을 위해 자유를 희생한다는 주장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관점에서 자유는 국가의 불간섭이라는 좁은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차별이 가져오는 지위 불평등의 가장 큰 피해는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기본적인 자유가 억압된다는 것이다. 부당한 차별은 결혼과 같은 개인 삶의 자유는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나 공적 영역에 참여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차별금지의 문제는 자유와 평등의 트레이드오프가 아니라 동등한 자유권을 지키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누군가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는 타인을 공적 삶에서 배제하는 한도까지 인정될 수 없다. 반면, 차별을 억제하기 위한 혐오 표현 금지 등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표현을 규제하게 되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오히려 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롤즈적인 해법은 각 개인이 서로 다른 좋은 삶과 도덕적 신념을 추구할 수 있는 넓은 틀의 정치적 공동체 안에서 공적 이성애 호소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자유들의 충돌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서로에게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이 책의 5장에서 채들러는 롤즈의 이론을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에 적용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의 결정자로서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면, 누구도 타인의 삶을 대신 결정할 만큼 우월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공동체의 결정이 누군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내려져서는 안 된다. 즉,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정치적 평등을 요구한다.

채들러에게 정치적 평등은 단지 정치 참여의 권리가 형식적으로 모두에게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누구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

다. 이렇게 볼 때, 현대 민주주의가 가진 중요한 현실적 문제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학의 여러 연구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이익이 과대 대표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을 만드는 유력한 경로는 정치적 기회의 불평등이다.

어떻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것인가? 챌들러는 현재 민주주의 체제에 존재하는 정치적 불평등을 명확히 비판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포퓰리즘 리더에 대한 지지로 나아가거나 대의 민주제의 성과에 대한 무분별한 칭찬의 동기가 되는 것 또한 경계한다. 선거 민주주의가 선출된 대표자와 일반 시민 간의 정치적 힘의 불평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으며, 문제는 모든 시민이 동일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의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투표, 공직 출마, 정치적 숙의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의 평등이라고 주장한다. 직접 민주주의에서도 참여의 수준과 정도에 따른 영향력의 불균등은 피할 수 없다. 또, 공직에 대한 평등한 실질적 기회만을 중시한다면 추천제가 유력하겠지만, 이는 대다수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참여 주체가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챌들러의 대안은 선거와 정당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참여 기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고 시민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는 개혁들이다. 이 개혁들의 내용 역시 챌들러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가 정치자금에 대한 챌들러의 입장이다. 정치자금 규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반론은 정치적 기부 또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한 형태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그 자체로 일리가 있다. 동일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돈을 사적 소비에 더 많이 투여하는 사람이 있고, 정치적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각자가 원하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 기부를 통한 정치 참여의 기회는 동등하지 않다. 부와 소득이 클수록 정치적 목적

을 위해 희생하는 사적 소비의 기회비용이 작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등한 정치적 열망을 가졌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며, 금권 정치를 통해 압도적 부를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힘이 강해진다면, 이는 결국 공동체의 운영을 결정할 정치적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 평등주의적 자유관을 가진다면, 정치적 기부에 대해 실질적인 상한선을 두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바우처 제안도 같은 맥락에 있다. 고액 정치기부 제한은 경제적 최상층과 중간층 간의 정치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애초에 소액의 기부를 할 경제력이 없는 계층이 받는 기회의 불평등은 해결할 수 없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정한 액수의 정치 후원에 대해 세액 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시민 간의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면세점 미만 소득의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바우처는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정치자금 사용권을 부여하여,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이를 배분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자유가 개인의 경제적 자원에 의해 지나치게 달라지지 않도록 만들려는 점에서 이 제안은 쉐들러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잘 보여준다.

시민의회에 대한 논의 역시 같은 방향에 있다. 쉐들러는 대의민주주의를 추첨제나 직접민주주의로 대체하려 하지 않는다. 선거와 정당은 여전히 책임성과 대표성을 조직하는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선거 민주주의만으로는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숙의의 기회를 갖고 공적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고, 정당 경쟁은 때때로 단기적 이해관계와 양극화를 강화할 수 있다. 시민의회는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이 전문가의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을 거쳐 쟁점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알게 형성된 선호의 집계에 머물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공적 판단 형성 과정이 되도록 보완하려는 장치이다.

물론 이러한 제안들이 모두 잘 작동하여,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장은 없다.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우회적 로비와 조직된 집단 영향력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심화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바우처는 시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동원의 경로를 만들 것인지를 문제를 남긴다. 시민의회 역시 그 결론에 어떤 법적·제도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가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들의 방향은 분명하다. 챌들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시민들이 동등한 정치적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적·실천적 조건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 해법 또한 엘리트주의적 통제나 포퓰리즘적 동원이 아니라, 평등한 정치적 자유를 구현하는 제도 개혁에서 찾고 있다.

이제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책의 입장을 살펴 보자. 이 책 2부 후반부의 장들에서 챌들러는 교육 개혁을 통한 기회균등, 조세·기본소득·기초 자산제 등을 통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완화, 그리고 노동권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적 권력의 민주화를 제안한다. 챌들러는 이러한 대안들을 롤즈의 정의론과 연결 짓고 있다. 그러나 이 주제에서 롤즈 이론과 챌들러의 구체적 처방과의 논리적 관계는 그다지 긴밀하지 않다. 먼저, 롤즈의 정의론을 해당 영역에 적용한 최선의 대안이 챌들러가 제시한 대안인지가 불분명하다. 역으로 챌들러의 대안을 정당화하는 최선의 근거가 되는 규범 이론이 롤즈의 이론이 아닐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챌들러가 경제적 불평등 해결의 의제를 논하는 7장의 내용을 살펴보자.

근래에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챌들러는 롤즈의 차등원칙을 규범적 기준으로 삼아 이 불평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롤즈에게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불평등이 허용되려면 그것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챌들러는 이 원칙을 현대 자본주의의 분배 구조에 적용하면서, 기존의 시장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입

장을 비판한다. 시장에서 형성된 소득과 부의 분포는 개인의 노력과 재능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상속, 사회적 배경, 교육 기회, 협상력, 자본 소유 구조의 산물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는 사후적으로 빈곤을 완화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경제적 자원이 더 넓게 분산되고, 모든 시민이 자기 삶을 실질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챌들러는 보편적 기본소득, 보편적 최소 상속, 시민 자산 기금 등을 검토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빈곤의 낙인을 줄이고,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협상력을 높이며, 돌봄이나 교육, 직업 전환과 같은 삶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제시된다. 보편적 최소 상속 또는 기초 자산제는 성인이 되는 시점에 일정한 자산을 제공하여 출발점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제안이며, 시민 자산 기금은 사회 전체가 축적한 부의 일부를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고 그 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제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챌들러는 보다 강한 누진 과세와 부유세, 상속세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이러한 대안 역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대변한다. 챌들러는 복지국가를 단순히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장치로 보지 않는다. 그가 구상하는 사회경제적 개혁은 시민들이 시장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선택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자산의 분배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생산적 자산과 경제적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된 뒤 조세와 복지로 그 결과를 완화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애초에 자산과 기회가 넓게 분산되어 있어야 하며, 시민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종속적 처지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롤즈 이론과 챌들러의 구체적 처방 사이의 거리가 드러난다. 차등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유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 기준이 곧바로 기본소득이나 시민 자산 기금, 보편적 최소 상속 중 어느 하

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대안들이 차등원칙을 만족시킨다는 것도 엄밀하게 논증하기 어려운 문제다. 예컨대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낙인 효과 방지, 개인의 선택 자유라는 장점을 갖지만, 같은 재원을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는 방식이 차등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보편적 최소 상속 역시 출발점의 평등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일시에 지급되는 자산이 지속적인 소득 보장이나 공공서비스 확대보다 가장 불리한 사람들의 처지를 더 잘 개선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시민 자산 기금도 자본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복지 지출, 공공주택, 교육 투자, 의료와 돌봄 서비스 확대보다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계층에게 이익이 될지는 말하기 쉽지 않다.

더 나아가 챌들러가 제시하는 대안들의 최선의 규범적 근거가 반드시 롤즈의 정의론이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기본소득과 시민 자산 기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집합의 평등을 중시하는 실질적 자유론으로부터도 정당화될 수 있고, 공화주의적 비지배 자유론과 연결될 수도 있다. 부유세와 상속세는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정당화할 수도 있고, 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사실 물질적 불평등은 하나의 원리로 환원되지 않는 여러 폐해를 낳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적 진단에 기초해 평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고, 그 도구적 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접근법이 차등원칙 부합 여부에 골몰하는 것보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맞는 대안을 찾고 평가하는 데 더 나을 수 있다.

챌들러의 사회경제적 논의에서, 롤즈의 이론은 구체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엄밀한 논증 장치라기보다는, 넓은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적 언어에 가깝다. 따라서 이 책의 사회경제적 처방은 롤즈 정의론의 직접적 적용이라기보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관점과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에 대한 분석이 결합한 구체적인 대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처방들은 롤즈 이론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각각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본다면, 500쪽이 넘는 이 책도 사

실 짧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이 서평에서 일일이 언급하지 못한 방대한 제안들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 각각은 더 엄밀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오늘날 자유는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정당화하는 언어로, 평등은 자유를 제약하는 언어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캔들러의 책은 이러한 대립 구도를 벗어나, 자유와 평등을 함께 실현되어야 할 정치적으로 이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유주의는 현재의 불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개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자유와 평등』의 대답은 비관적이지 않다. 이 책에서 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나 국가의 불간섭에 머무는 이념이 아니다. 평등하게 자유로운 시민이라는 관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자유주의는 차별과 배제, 정치적 불평등, 부의 집중에 맞서는 정치적 기획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획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다원적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정치 공동체의 틀을 형성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와 평등』은 이러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기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